

# 예금금리 2%대 제자리 걸음 속 연 3% 이상 특판상품 관심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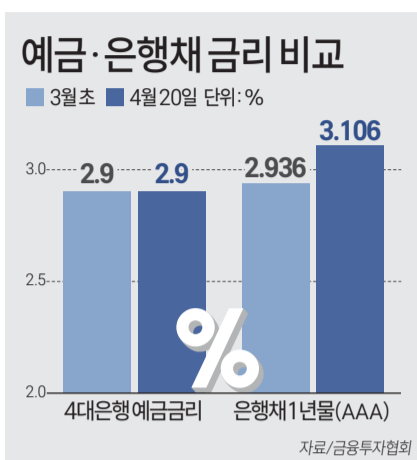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1%대 묶어 은행, 공격적 예금유치 유인 줄여 전북은행 연 3.11%, 농협 3.10% 부산, 1.85% 우대금리 연 3.20%

예금금리가 대부분 연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더 높은 금리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안정성을 갖춘 연 3% 이상의 예금 상품 수요는 여전하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주요 은행의 예금금리는 여전히 2%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여가며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2개월 기준 2.85~2.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와 비교해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다.

금리가 정체된 배경에는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추가 자금 확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점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대 수준으로 묶고, 은행의 대출 자산 확대 여력을 제한했다. 은행들은 예금을 공격적으로 유치할 유인이 줄어들었고, 굳이 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금 수요가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지난달 초 2.936%에서 이달 17일 기준 3.106%로 뛰었다. 사실상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예금금리가 낮아지는, 은행채 금리가 예금금리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고금

리 상품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연 3%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이나 특판상품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1년 만기 기준)으로 연 3.11%(세전이자율) 제공한다.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과 수협은행의 '헤이 정기예금',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은 각각 연 3.10%를 제공했다.

부산은행의 '더 특판 정기예금'은 세전 이자를 1.8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에는 ▲모바일뱅킹 금융정보 및 혜택 알림 동의 우대이율 0.10%포인트(p) ▲신규고객 또는 정기예금 중도해지고객 우대이율 0.40%p ▲특판우대이율 0.50%p(24개월시 0.85%p) 등이 붙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예금금리를 웃도는 상황이지만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수요 자체가 크지 않다"며 "당분간 예금금리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이고, 일부 특판 상품 위주로만 3%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제재심 표류

위원 간 법리해석 차이로 미결론 6월까지 확정 결과 만나올 수도 우리·신한카드 제재 속도도 변수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카드 제재 이후 우리·신한카드 제재도 예정된 가운데 두 카드사의 제재 논의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다. 제재심에는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와 정상호 현 롯데카드 대표가 동반 참석했다.

제재심은 오후 5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두 시간 넘게 안건을 논의했으나, 일부 사안을 둘러싼 위원 간 법리 해석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영업정지 4.5개월은 지난해 말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2014년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 위반 성격으로 반영되면서, 기존 3개월에 1.5개월(50%)이 가중돼 산정된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카드 징계 수위 확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 기구가 아닌 만큼 오는 6월까지도 제재 확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제재심이 오는 30일인데, 구체적으로 그날 안건을 다시 상정하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다음 제재심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날 롯데카드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 모습. /뉴시스

아직 추가 안건 논의의 일정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제재심이 한 달 이상 지연될 경우 우리·신한카드 제재 속도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카드 제재 이후 두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실제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열리기 전 "우리카드 가맹점주 정보 유출에 관한 검사는 끝난 상태"라며 "롯데카드 제재가 끝나는 대로 우리카드 제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업계 전반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리카드에서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한카드에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맹점 대표자의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약 19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

## “통화·정책 만으로 한계” 구조개혁 강조

이창용 한은 총재 이임식 “금리 변동 안 시키는 것도 중요 동결기조, 적극적 정책적 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퇴임하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통화정책 상황을 두고 제기되는 ‘딜레마’ 프레임에 대해 “금리를 변동 안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동결 기조 역시 적극적인 정책 판단이란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배포한 이임사에서 지난 4년을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 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고 돌아봤다.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두 차례의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 올렸고, 이후에도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비상계입,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중동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등 복합 충격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한국형 포워드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시장과의 소통방식을 개선했고, 20편이 넘는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이 총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핵심 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시지는 구조개혁이었다. 그는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도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이 크게 확대된 만큼, 제도 개선 없이 과거처럼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저성장, 노동·교육 문제 역시 단기 처방보다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도 단순 낙관론을 경계했다.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특정 산업 의존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국은행이 앞으로도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임식 직후 문답에서도 그의 문제의식은 이어졌다. 최근 중동 사태와 미국 변수 등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금리를 변동 안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동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지금 국면에서 선택한 능동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퇴임 직전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부동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저출산, 사회갈등, 생산적 투자 위축까지 맞물린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내달 수도권 입주 3000세대 ‘공급가뭄’

전국 입주물량 1만1685세대 집계 전년비 33%, 전월비 28% 감소

다음달 수도권 입주 물량이 3000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까지 추정치를 감안해도 월별 기준 올해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입주물량은 1만1685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7387세대) 대비 32.8%, 전월(1만6311세대)과 비교해서도 28.4%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161세대, 지방이 8524세대로 지방 물량이 전체의 73% 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은 전월(8193세대)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올해 월별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월별 물량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단지 3곳이 전부며, 경기와 인천에서도 입주물량이 줄었다.

서울은 3개 단지에서 296세대가 입주한다. ▲송파구 가락동 더샵송파루미스타(179세대) ▲강동구 길동 디아테온(64세대) ▲강동구 천호동 비오르(VIORR)(53세대) 등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들로 서울 내 수요에 미치

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기권은 5개 단지에서 2064세대가 입주한다. ▲화성시 806세대 ▲안양시 538세대 ▲시흥시 400세대 ▲성남시 320세대 등이다.

화성에서는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봉담읍, 806세대)가 입주하고, 안양에서는 안양자이더포레스트(석수동, 483세대)와 힐스테이트안양팰루스(안양동, 55세대)가 나란히 입주한다. 시흥에서는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정왕동, 400세대), 성남에서는 엘리트프세콰스카이(신촌동, 320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인천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에 위치한 루원시티서한이다음(서구가정동, 801세대) 1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총 8524세대, 13개 단지가 입주한다. ▲경상북도 2888세대 ▲경상남도 1390세대 ▲대전광역시 1349세대 ▲충청북도 874세대 ▲전북특별자치도 873세대 ▲부산광역시 638세대 ▲광주광역시 312세대 ▲대구광역시 200세대 순이다. 경북에 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충청·경남 등지에서 중소 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